



파병 정책이 한국인들의 납치를 낳았다

아프가니스탄 한국군 즉각 철군하라

탈레반이 협상 시한을 하루 연장하기 했지만 아프가니스탄에서 납치된 한국인 23명의 안전은 여전히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인들보다 하루 전에 납치된 독일인 2명은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이 철군 요구를 거부한 뒤 곧 살해된 듯하다.

지금 납치된 한국인들과 그 가족들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하고 불안할 것이다. 우리는 납치된 한국인들이 하루 속히 무사 귀환하길 바란다.

하지만, 정작 이번 사건의 원인이 된 파병 정책의 주역 노무현 정부는 납치된 한국인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줄타기를 계속하고 있다. 사태를 해결할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 — 한국군 즉각 철수 — 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2004년에 김선일 씨가 이라크에서 무장 단체에 납치됐을 때도 정부는 비슷한 태도를 취했었다. 당시 노무현은 파병 철회는 “테러에 굴복하는 것”이라며, 김선일 씨 본인과 반전 운동의 철군 호소에 아랑곳하지 않았고, 그

결과 김선일 씨는 허망하게 목숨을 잃어야 했다.

불과 다섯 달 전에도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다산부대 소속 윤장호 병장이 저항세력의 공격으로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당시에도 반전 운동은 한국군이 철수하지 않는 한 비슷한 비극이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그러한 경고를 무시한 채 미국의 침략 전쟁과 점령을 계속 지원했다. 따라서 이번 납치 사건 같은 비극의 재발은 거의 필연이나 다름없었던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무모한 선교 활동”이 핵심 문제라는 <조선일보> 등의 주장은 문제의 진정한 본질, 즉 노무현 정부의 계속되는 파병 정책에서 대중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술수일 뿐이다.

‘납치 사건 대책’은 간단하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모든 군 병력을 즉각 철수하면 된다. 마드리드 테러 사건 이후 집권한 스페인 사파테로 총리는 집권 직후 이라크 주둔 스페인군의 철군 개시를 선언했고, 6주 만에 1천7백 명을 모두 철군시켰다. 파랍가족 비상대책위원회도 “가족

들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20명을 살려내주시길 바란다”며 “즉각 철군을 강력 촉구”했다.

또, 어제 밤 10시 30분에 열린 긴급 철군 촉구 집회에도 3백여 명이 참가해 정부에 즉각 철군을 요구했다.

그 동안 노무현 정부는 국민 대다수의 철군 요구를 무시하고 파병을 계속 확대·연장해 왔다. 그리고 그러한 파병 정책 때문에 김선일 씨와 윤장호 병장이 목숨을 잃어야 했다. 노무현 정부가 만약 이번에도 철군을 거부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할 모든 비극은 고스란히 노무현 정부의 책임이 될 것이다.

상황은 여전히 매우 불안정하다. 심지어 나토군과 정부가 ‘인질 구출 작전’이라는 재앙적 무리수를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언제나 긴급하게 행동 계획이 잡힐 수 있다. 파병반대국민행동 홈페이지(www.antiwar.or.kr)에 게재되는 계획을 꼭 확인하고 그에 따라 신속히 행동에 동참하자.

비극의 뿌리는 침략 전쟁과 점령이다

미국 부시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을 침략한 지 7년이 지났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의 현재 상황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다. 부시가 약속한 “자유”와 “민주주의”는커녕 아프가니스탄 주민의 절반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고, 실업률은 40퍼센트를 웃돈다. 여성들의 인권은 오히려 악화했다.

전쟁 이후 대다수 아프가니스탄 주민들에게 깨끗한 식수와 전기, 의료시설 등은 ‘사치품’이 됐다. 수도인 카불조차 하루에 2시간 정도만 전기가 들어오고, 아프가니스탄 전체의 90퍼센트는 아예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다.

아프가니스탄 주민들의 평균 수명은 43세로 추락했다. 비참한 점령 상황 때문에 2006년에만 2백16만 1천명의 난민이 발생했다.(미국난민이민자위원회(USCRI))

얼마나 많은 아프가니스탄인들이 전쟁과 점령으로 죽었는지는 정확히 가늠할 길조차 없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2006년에 미군이 주도한 군사작전으로 사망한 사람만 4천4백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더구나, 올해 들어 미군과 다국적군이 군사작전을 확대하면서 사상자 수가 크게 늘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 외국 지원기구, 유엔(UN)이 공동 작성한 〈아프가니스탄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올해 상반기에만 3천7백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최근에도 점령군은 동부 파크티카 주(州)에서 탈레반을 소탕한다며 학교에 있던 어린이 7명을 학살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프가니스탄인들이 점령세력에게 극도의 환멸과 분노를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반면, 한때 아프가니스탄인들 사이에서 신뢰를 잃었던 탈레반은 외국 점령군 축출을 내걸고 싸우면서 다시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점령이 추악하고 야비할수록 그에 맞선 저항 역시 온갖 수단을 동원하기 마련이다. 오직 부당한 침략 전쟁과 점령이 끝날 때만 이 모든 비극의 뿌리를 도려낼 수 있다.

미군 폭격으로 부상당한 아이 – 매년 4천 명 이상의 민간인이 미군 주도 군사작전에 희생당한다

미국 지배자들은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전체를 통치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입장을 바꿨다. 그들은 탈레반에게 아프가니스탄의 모든 비극의 책임을 떠넘겼다. 특히 탈레반의 여성 학대를 비난했다. 그러나 탈레반의 여성 학대는 사우디아라비아 왕가의 교리에서 가져온 것이다. 그러나 부시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왕가를 동맹으로 여긴다.

2001년 9·11 이후 부시 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을 빌미로 아프가니스탄을 침략했고 탈레반을 변방으로 몰아냈다. 그 대신 부패한 북부동맹이 돌아오고 전 CIA 첩자인 카르자이가 대통령이 됐다.

그러나 이들의 인권유린은 탈레반을 능가했고 결국 6년 후 탈레반은 다시 부활했다. 원래 2001년에 탈레반은 대중적 지지를 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다. 아무리 끔찍한 방식을 쓰더라도 탈레반이 미국 주도의 제국주의 점령에 맞서는 무장 저항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 정부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조차 “나토와 미국의 군사 작전으로 발생한 민간인 희생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인들이 차라리 탈레반과 협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시의 ‘테러와의 전쟁’을 지지해 온 노무현과 주류 언론들은 탈레반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탈레반 – 제국주의의 피조물

주류 언론들은 탈레반을 “국제 사회를 위협하는 … 광신적 집단”으로 묘사한다. 그러나 그들은 탈레반이 ‘국제 사회’의 산물이란 점은 지적하지 않는다.

탈레반은 원래 이란 이슬람 정권의 영향력이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에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정부, 사우디아라비아 왕가, 파키스탄 정부에 의해 창조됐다. 사우디아라비아 왕가의 돈으로 수백 개의 마드라사(종교 학교)가 설립됐고 소련 침략과 뒤이은 내전으로 발생한 아프가니스탄 고아들이 이곳에서 공부하며 ‘탈레반[학생]’이 됐다. 그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왕가가 신봉하는 초보수적인 와하브파 이슬람 교리를 배웠다.

유노칼

1996년에 탈레반이 부패한 북부동맹 세력을 몰아내고 카불을 장악했을 때 미국 다국적 석유 기업 유노칼은 탈레반과 협력해 석유 파이프라인을 만들 생각이었다. 그러나

제국주의 점령군을 돕는 다산·동의 부대

노무현은 “다산·동의 부대는 의료와 구호 지원을 위한 비전투부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인들에게 한국군은 미군과 함께 들어 온 침략군일 뿐이다.

다산·동의 부대가 인도적 지원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는 정부의 선전과 달리 아프간 파병 부대의 주임무는 아프간에 파병된 다국적군을 위한 군사시설 개·보수와 진료 활동이었다. 아프간 주민에 대한 진료가 있다면 그것은 매우 제한된 소수, 특히 점령군과 결탁한 아프간 현지의 엘리트들이나 정부 관료들에 한정될 뿐이다.

다산부대는 바그람 기지 내 비행장 활주로와 부대 방호시설을 보수하는 등 명백히 미군의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활동을 해왔다. 바그람 기지는 많은 민간인들이 끔찍한 고문을 당한 곳으로 흔히 ‘아프가니스탄의 아부 그라이브’라고 불리는 곳이다. 미군 전투기가 사용하는 활주로를 보수하고 저항세력과의 교전에서 부상당한 점령군 병사들을 치

료하는 일은 인도적 지원 활동이 아니라 점령 지원 활동일 뿐이다. 국회 보고자료에도 다산·동의 부대는 “대(對)테러전쟁지원부대”라고 명시돼 있다.

다산·동의 부대의 실제 구실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됐던 병사들의 증언에서도 드러난다.

“평화와 재건을 선사하기 위해 파병을 간다는 대의명분과는 달리 나는 점령군으로서 피지배자들을 협박하고 모욕하는 일에 끊임없이 동원돼야 했다. … 점령군으로서 한국군의 횡포는 …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다.”(강성주, 대학생)

더구나 미국 정부는 ‘지역재건팀’에 참가하는 형태로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그리고 김장수 국방장관은 “지역재건팀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점령을 계속 지원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지역재건팀’에는 ‘재건기동부대’라는 전투 부대가 포함된다.

제국주의 전쟁·점령 지원의 종단을 연말까지 미룰 이유는 전혀 없다. 당장 철군하라.

이라크와 레바논 파병 부대도 즉각 철군해야 한다

아프가니스탄뿐 아니라 이라크와 레바논 파병 군대도 제국주의 점령군의 일부로 파병됐기 때문에 이들뿐 아니라 현지의 모든 한국인들이 언제든지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이툰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이라크 북부 쿠르드족 지대는 더 위험해지고 있다. 최근 키르쿠크 유전 지대에서 폭탄 공격이 감행됐고 터키군이 북쪽 국경을 빈번하게 넘나들고 있다.

레바논 상황도 다르지 않다. 서방 제국주의와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친서방 정부를 이용해 헤즈볼라와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공격하고 있다.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유엔 ‘평화유지군’에 대한 공격이 이미 시작됐다.

단지 파병 부대 장병들만이 위협에 노출되는 것은 아니다. 2004년 스페인 마드리드 열차 폭파 사건, 2005년 영국 런던 지하철·버스 폭파 사건, 2007년 영국 버밍엄 테러 미수 사건을 생각해 보라. 스페인과 영국은 ‘테러와의 전쟁’의 주요 동맹이자 파병국이었다. 둘 사이의 연관성은 너무 명백하지 않은가? 똑같은 비극이 한국 땅에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프가니스탄·이라크·레바논에서 모든 한국군이 지금 당장 철수해야 한다.